

국회의원 10명·공무원 92명... 536명 투기 의혹 수사

이틀만에 100여명 증가... 특수본, 4~5명 내사·수사 착수

민주당 서영석·양향자 실명 공개... 전 행정도시건설청장도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서구을) 국회의원 등 고위직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28일 "최근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진행된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이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26일 기준 110건·536명으로, 24일 기준(89건·398명)과 비교해 이틀 만에 100명 이상 크게 늘었다.

536명을 신분별로 보면 전·현직 공무원 102명, LH 직원 32명, 민간인 322명, 신원 확인 중 80명이다. 110건을 접수 시별로 분류하면 경찰 자체 첩보·인지 82건, 고발 17건, 타 기관 수사 의뢰 6건, 신고센터·민원 5건이다.

전·현직 공무원 102명 중에는 국회의원과 전 행정도시건설청장도 포함됐다. 언론 등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은 10여명에 달한다. 이 중 특수본이 내사·수사에 착수한 대상은 현재까지 4~5명으로 파악된다.

특수본의 핵심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명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양향자 의원 등 2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6일 서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연)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은 양 의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26일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의원에도 일반 투기꾼과 똑같은 법적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여서 신병 처리에 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지난 26일 전·현직 고위직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재임 시절 부인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도시건설청장(행복청) 청장 A씨의 주거지와 행복청 청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차관급인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발부된 점으로 미뤄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직원들을 파견받아 지난 10일 특수본을 출범했다.

앞서 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사건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시도경찰청에 배당할 것으로 확인된 양 의원은 "화성시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당시 직장이었던 삼성전자 근처 동탄에 거주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곳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면서 "보

도에 나온 토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고 주변 토지거래도 거의 없어 시세 산정 자체가 어려운 땅이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토지는 공직 영입 전 구매했던 토지로 공직에 들어오기

로 결정되면서 수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매매에 실패했다"면서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수성 vs 탈환' 재보선 총력전

'D-9' 與 "이명박 시절 회귀 안돼"... 野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여야가 명운을 건 4·7 재보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유권자 수 1135만명에 달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두 여야 일대일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법진보 대 법보수 진영 간의 사활을 건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을 내세워 지지층을 총결집하겠다는 생각이고,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정권교체의 길'을 열겠다고 버리고 있다.

28일 현재까지 초반 여론조사상으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각각 민주당 박영선, 김영춘 후보보다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터지면서 여권 전체 지지율이 하락한데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비리 등의 의혹 공세에 집중하며 "이명박(MB) 시절로의 회귀는 안 된다"는 논리로 여권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LH 사태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반전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른바 '사이 진보'(숨은 진보 지지층)를 투표장으로 불러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하며 '정권심판론'을 고리로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으로의 지지 확대를 시도 중이다. 또 "박원순 시진 2가 되면 안 된다"며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 사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까지 열흘이 남은 만큼 여야 후보의 TV 토론, 사전투표를 포함한 전체 투표를, 막말 등 돌발 사건의 등장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내년 3월 대선의 전초전 격인 이번 재보선 결과는 차기 권력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정권의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제3후보들의 활동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 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면서 당내 대권구도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구심점이 사라져 주자 간 갈등양상이 본격적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향후 야권 재편에서 주도권을 갖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제3지대를 포섭하며 세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패배 시에는 국민의힘이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제3지대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靑, 차관급 8명 인사

통일 최영준·국토2 황성규·병무 정석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인기 후반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보선 이후로 예상되는 개각에 앞서 부처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생각이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과거부 1차관에는 융통력 과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2차관에는 조정식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이 내정됐다.

통일부 차관에는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국토부 2차관에는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또 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관세청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병무청장에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업무 전문성, 도덕성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인재를 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등의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탁된 8명의 차관급 인사들은 모두 1주택자로, 최근 논란이 된 3기 신도시 관련 땅을 보유한 사람은 없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공수처, 4월 수사 가시화

조직 구성 막바지... 검사 임용·3자 협의체 논의 결과 변수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두 달 넘게 심혈을 기울인 조직 구성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언해왔던 '4월 초 수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28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1월 21일 출범 뒤부터 공수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해 총력을 쏟아냈다.

2개월 넘는 작업 결과 하드웨어인 검사·수사관 채용 등 인적 구성 작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지난주 19명을 뽑는 평검사 임용을 위해 면접과 대통령 추천을 1차로 완료했고, 다음 달 2일에는 4명을 뽑는 부장검사 추천 절차도 매듭지을 예정이다.

공수처가 예정대로 검사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9일부터 이 규칙에 대한 검경의 의견을 듣는 '3자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3자 협의체에서 논의의 핵심은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 이첩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아직 수

사에 착수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단 3자 협의체 논의는 검사 기소 권한을 놓고 검찰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두고 이미 양 기관이 충돌한 바 있다.

그렇다고 사건·사무규칙 없이 '허점'이 많은 공수처법만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없다. 검사 임용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중 '즉시 전력감'인 검찰 출신은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법이 허용하는 12명을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으로 채운다고 해도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한 나머지 13명은 수사 경험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공수처는 신임 검사들을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수사에 본격 투입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